

“광주 동부경찰서 신축 부지 진입로 공사로 안전 우려” 주장

광주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진입로가 암반 지대에 들어서는 데 대해 인접 복지관이 시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A사회복지관은 동부서 신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청, 광주시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을 가진 동구를 비롯해 동구의회, 동부서에도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인원은 4160명이다.

A사회복지관 측은 동부서 신축을 위해 암반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공사 시 암반 인근 복지관 건물의 심각한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관내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600여명”이라면서 “암반 제거 공사가 시작되면 복지관 건물이 훼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과 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난 경우 건물과 진입로 부지는 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은 “현재 사업 변경이나 부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무진동·무소음 공법을 적용해 지반 굴착·암반 공사 시 피해가



광주 동부경찰서신축이전부지진입로가들어설예정인암반지대. 빨간색부분은암반제거공사가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구역. 사진=A사회복지관탄원서갈무리

복지관 “암반지대 공사로 건물 균열·붕괴 발생할 수도”

‘동부서 신축 사업 취소’ 탄원서 경찰·행의정 기관 제출

광주경찰 “부지 변경 못해, 공법 적용해 피해 최소화”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요청해 안전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2만22㎡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1만6173㎡)의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372억원(토지매입비 35억·공사

비 299억·설계비 등 3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은 내년인 2024년부터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이 목표다. 경찰은 동부서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다음달 중 관할 자치구인 동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전남교육’ 추억 앨범

전남교육청, 시대별 학교생활 사진공모전 ‘나 때 한 장’ 진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 지역 학교와 교육활동을 담은 추억 앨범 ‘나 때 한 장’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 지역의 교육 역사와 학생들의 시대적 일상을 기록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2010년까지 전남 지역 학교 및 교육활동이 담긴 사진이다. 학교 전경, 학생 활동, 학생들의 일상이 잘 드러난 사진이면 출품할 수 있으며, 전남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전남교육통’ 누리집(www.jnedu.kr) 또는 이메일(jn-edu@naver.com)로 접수하거나 우편(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앞)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진은 반드시 본인 소유여야 하며, 원본 또는 복사본(스캔)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가 스캔 후 반환한다.



전남교육청은 출품 사진 중 매일 5점 이내의 작품을 선정해 각 1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전남교육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에 매일 연재된다.

이형태 홍보담당관은 “세월이 지나도 학생 시절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전남교육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장이자, 세대 간 공감과 대화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교육감 감사관 부당채용 의혹’ 첫재판… 공방전 치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당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04호 법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두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면접점수 상향 수차례 관여”

변호인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강력부인… 잇선 수사 계속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용 심의·의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오른 B씨가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던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은 “A씨가 작성·행사했다는 허위공문서에 담긴 추천기관 기재 사실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한 일로서 ‘허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비실명 관리번호와 그 순위만 말했을 뿐 개별 후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점수차를 말한 바도 없

다”며 “이미 평가위원 5명에게 배포된 자료여서 공무상 비밀에도 해당되지 않고 누설도 아니다. 누설됐다고 해도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 실무 팀장으로서 평가위원에게 읍소·요청·부탁은 할 수 있었는지 안정사회적 지위나 당시 관계를 고려하면 평가위원에게 지시할 직권이 없다”며 “평가위원이 의견을 수용해 점수를 조정할 일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감사원이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었다. 경찰이 당초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각각 법원과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면접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교육청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3년여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녹내장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신청한 보석을 놓고도 검찰과 A씨 측 법률대리인 사이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A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감사관 후보자 면접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우선 구속기소하되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내 평가에 관여해 결과를 왜곡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전남에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면접평가 관련 인사 서류 일체 등을 확보·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철 기자

“부실대출 수사 무마” 역대 금품 챙긴 변호사 징역 3년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명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 대출 관련 브로커 C씨로부터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실제 검찰 수사 편의를 봐줄 방법도 모르면서 검사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기관과의 교제비를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겨 죄질이 무겁다.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5억7000만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범행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외 도피 중인 또 다른 공범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 B씨와 대출 브로커 C씨는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씨는 대출 앞선 등 뇌물 비위로 따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